"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서울시, 24일부터 합동점검 돌입

액상형까지 규제대상 포함
적발 땐 10만원 이하 처분
시행 전 2주간 계도·홍보
판매점·무인매장 집중 점검
금연클리닉 연계 지원 확대

Chat GPT로 생성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흡연 금지 메시지를 강조한 이미지.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 전 홍보·계도와 시행 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는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 전 약 2주간(4월13일~4월23일)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상대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일부터 3주간(4월24일~5월15일)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을 꾸려 현장 중심 점검을 벌인다.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과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손목닥터9988을 통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오류동 럭비구장 부지에 2071가구 복합개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온수역 인근 옛 경기장터 대변신

서울 오류동 럭비구장 부지에 200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 인근에 있다. 이 구역은 럭비경기장이 있던 곳이다.

서울럭비구장은 1974년 국내 최초 민간 럭비경기장으로 개관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럭비경기장이었다. 이용률이 낮고 방치되다시피 했다.

이곳이 상업·주거·문화 시설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지하 5층, 지상 43층, 연면적 약 42만㎡ 규모로 판매 시설, 근린 생활 시설, 공동 주택(2071가구)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택 수는 기존 1790가구에서 2071가구로 281가구 늘었다. 비주거 면적이 줄어든 대신 시민을 위한 공원 면적은 증가했다.

사업 부지 중앙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부에 서울형 공공 키즈 카페, 어린이 과학 체험관, 느린 학습자 교육 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을 조성한다. 신설된 기술인재사관학교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대규모 열린 녹지와 문화·상업·주거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돼 일상 속 여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서남권 전역에 성장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회계 안내서 배포

공·사립유치원 등 회계기준 차이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공통 회계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 지침 차이로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관 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방과후 강사, 학교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교육부 "임직원 아닌 민간인 신분"

방과후 강사는 승용차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방과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8일부로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되는 점과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로 전파했다.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전날 교육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하남, 중동 위기 대응 300억 긴급 추경

'비상경제 TF' 구성해 상시 운영

하남시청 전경.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 지원에 앞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민생 안정에 나섰다.

하남시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4월 중 정부지원금 시 부담분과 자체 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TF'를 구성해 상시 운영에 돌입한다. TF는 에너지수급관리대책반,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연간 1,200억 원으로 늘리고, 5월부터 8월까지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 월 구매 한도 역시 30만 원으로 확대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협업해 신규 입점 점주에게 2% 수준의 저율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등에 활용 가능한 '사장님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포천, 9월 국내 첫 드론 공방전 개최

국방부 등 6개 부처 협력

포천시는 국방 무인체계(드론) 발전과 관련 산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2026 KDCC)'을 오는 9월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다부처 협력 행사로 추진된다. 실전형 드론 공방전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까지 함께 이끌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드론과 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으며,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승진과학화훈련장이 대회장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오는 6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본선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선에서는 예선에서 선발된 우수팀(드론 4팀, 대드론 4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첨단 무인장비 전시와 시연, 세계 레이싱 드론 챔피언의 비행 시연 등 실전성과 흥미를 모두 갖춘 대회가 될 전망이다.

시는 드론 공방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계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